

#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을 잡아야...

글 | 이기중 \_ KISTEP 혁신기반팀장

지난 3년간 정부에서는 국가자원의 수도권 집중과 편중을 해소하고 쇠퇴일로의 지역산업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회생의 활로를 찾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역량제고는 국가 정책의 주류가 되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상당부분 이루어졌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이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혁신과 지역산업의 거점성장전략이라는 점에서 볼 때, 지역에 대한 과학기술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총체적 성패에 매우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지역편중 해소와 지역전략산업 육성

과학기술부문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은 크게 과학기

술자원의 지역편중 해소와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으로 압축할 수 있다. 과학기술자원은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역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7년까지 전체 국가 R&D예산의 40%를 지역에 배분한다는 정책목표를 수립하였으며 20여개의 R&D사업을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혁신계정사업으로 묶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은 지역 혁신역량의 기반을 구축하여 자립형 지역경제를 건설하겠다는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5대 핵심시책 중 하나로서, 16개 광역지자체별로 4개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총 64개의 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추진성과를 보면, R&D예산의 지역배분은 과학기술관련 부처, 과학기술혁신본부, 예산처 등의 노력으로 목표연도인 2007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예견된다.



2003년 9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토론회에서 여야 정책의장,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역불균형 시정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또 지역의 혁신역량이 낮은 지역에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바람직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혁신계정으로 관리되는 R&D사업 예산의 약 80% 정도가 지역전략산업에 집중되어 쓰이고 있다. 이렇듯 외형상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은 매우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세미나나 언론 등에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은 정책형성, 집행 등 정책 전과정에서 전략의 부재와 책임소재의 불분명, 지자체의 참여와 관심부족 등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심지어 정책실패를 예단하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지역 R&D 예산배분의 전략성 확보해야

그렇다면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각종 문제점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들 문제점과 논쟁거리를 감안하여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몇 가지 짚어보자.

첫째, 지역 R&D 예산배분의 전략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 R&D 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으로 배분되는 R&D 예산은 비중과 절대규모 면에서 상당히 증가하여 왔기 때문에, 지역 R&D 예산의 배분원칙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역전략산업을 연계하는 자립형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현실과 혁신역량을 고려한다는 수준의 배분원칙만으로는 3~4조원에 이르는 지방 R&D 예산의 쓰임새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지방 R&D 예산배분에서 전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관련 부처에서 2007년도 R&D 예산을 요구할 때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어느 사업에 어느 정도의 R&D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고, 이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각 부처의 역할에 맞는 전략기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를 모아 국가 전체의 지역 R&D 사업과 예산의 배분원칙이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국가 R&D 정책과 지역 R&D 정책 간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국가적 전략 로드맵이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전략산업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

다. 하지만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입지한 지역은 바로 지역전략산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바로 동일한 지리적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게다가 특정지역의 전략산업을 평가하는 경우 차세대성장동력산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보면, 국가적 차원의 R&D 정책과 지역적 차원 R&D 정책이 상호 분리될 성격의 정책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대덕특구단지의 지원 사업이 과연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틀 내에서 논의되어야 할 성격인지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은 그동안 균형발전정책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 시나리오에 대해 홍보가 부족한 느낌이다.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이 당초 목표에 비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각계에서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대응해야 하는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는지 아니면 지자체에 있는지,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 되는지 등이 모호하다.

#### 지역균형발전의 목표는 지역경쟁력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국민의 세금을 나누어주는 수혜적 성격의 배분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이다.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과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은 틀림없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성공을 위한 좋은 징후들도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역의 R&D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전략산업을 평가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차원에서 그동안 추진된 사업들의 성과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역의 이런 노력이 어우러진다면 지역의 균형발전정책이 성공한 수범사례가 될 수 있다. 과학기술의 지역정책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자들이 지역의 성장 동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